

보 도 자 료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4길 20 맨하튼21빌딩 921호
전화 02-780-9263 팩스 02-780-9264 이메일 cicri.consumer@gmail.com

문의 (사)소비자권익포럼 법제위원장 고흥석 교수 ☎ 02-780-9263

소비자를 위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

통신판매중개업자 지위, 권한 및 소비자의 신뢰에 적합하게 개정필요
숙박, 렌탈 등 적용대상 사업확대, 청약철회 기간 증대 필요
사업자 실수로 잘못 전송한 문서도 효력인정 해야

전자상거래는 소비자가 재화 등을 구입하는 주된 거래방식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다양한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2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수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져 왔지만, 새로운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소비자피해는 단지 소비자의 문제만이 아닌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장애요소이기 때문에 소비자신뢰의 확보를 통해 전자상거래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동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동법상 통신판매의 정의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모든 유형의 전자상거래를 규율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별도로 규정하고, 숙박시설이용계약 및 물품의 렌탈까지 규율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인접지역 내 통신판매에 대해서도 정보제공의무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중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동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사업자가 잘못 전송한 전자문서의 효력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이를 주장한 경우에 한해 그 효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소비자가 합리적인 구매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재화 등에 관한 정보는 주문하기 이전에 제공하도록 개정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가격에 관한 정보는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중 일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취약계층 소비자인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소권에 관한 정보를 모든 제한능력자에게 제공하도록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동법의 핵심적 내용인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그 기간의 기산점, 배제사유 및 행사의 효과 전반에 있어서 소비자 중심이 아닌 사업자 중심으로 그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구매의사를 충분히 재고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규정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통신판매중개시장의 현황을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법의 다른 규정과의 관계 역시 고려하지 않았다. 특히,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간편한 면책요건은 소비자보호와 상반된다. 따라서 동법상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의무와 책임 규정은 통신판매중개시장에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지위, 권한 및 소비자의 신뢰에 적합하게 개정하여 이 시장에서의 소비자보호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사단법인 소비자권익포럼(이사장 이은영)에서는 21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박찬대, 제윤경 의원과 한국소비자법학회와 공동으로 제7차 소비자권익포럼을 개최하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방안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의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피해 현황과 이슈’에 대한 발제에 이어 고형석 선문대 교수, 소비자권익포럼 법제위원장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변웅재 위원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분쟁조정위원회), 김운태 부회장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최정배 서기관 (국회입법조사처), 김세준 교수 (경기대학교 법학과, 한국소비자법학회 이사), 송상민 국장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의 토론이 이어졌다.

포럼 모습



사단법인 소비자권익포럼
www.kcrf2017.org